

[논평]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 결정에 대해

총장 직위해제에 관한 법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대학의 위기와 구성원의 고통을 초래한 총장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에 3월 16일 법인 이사회의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본 노조는 법인이 고뇌와 숙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 판단하고 존중의 뜻을 밝힌다. 법인은 총장 직위해제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 법인의 모든 권한 행사가 법인의 책무를 동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대학이 조속히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의 책무에도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차기 총장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차기 총장 임명 혹은 선출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이 분분하다. 본 노조는 현 총장 직위해제 결정 이전부터 총장 임명(선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행 제도가 학내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내 교원 독점에 가까운 선출방식이 일부 구성원을 위한 경영 행태로 귀결됨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현행 총장선출제의 폐단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대학 공동체의 생존이 벼랑 끝에 선 지금부터라도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민주성이 담보되는 방식 혹은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생존문제에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일부에서 총장의 권위가 대학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식의 언동들이 나타남도 사실이다. 특히 당면 과제들의 수행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 과제가 총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진행되었는지 되물어보기 바란다. 대학 내외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대학 이미지를 훼손하는 언행의 기반이 저급한 정치적 의도임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대학 위기 극복의 과업을 방해하는 일부의 저의를 본 노조는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